

기업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 ESG 경영	
10차시	다급해진 '공급망 ESG 경영'관리

## 1. 다급해진 '공급망(supply chain) ESG 경영' 관리

특정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에 포함된 이해관계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ESG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공급망(supply chain)은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 생산에 관여되는 모든 기업과 단체를 망라한 것이 '공급망'이다. 부품 공급업체, 원재료 생산업체 등 원청과 하청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공급망에 관여된 모든 기업에 ESG를 적용하려 한다. 업포가 아니다. 2024년도부터 실사를 포함해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견·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이 있지만 녹록치 않다.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대기업은 법안 발효와 함께 2024년도부터 실사 대상이다. 조건에 맞는 기업만 실사를 하던 과거와 달리 원청과 하청기업 등 이해관계자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고 ESG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수준이다.

### 가. 공급망 ESG가 부상하게 된 배경

'공급망 ESG'가 갑자기 부상하게 된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마냥 쳐다볼 수만 없다는 명분이 있기에 다양한 예측은 역측으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개별기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생산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서로 잘하는 것을 협업을 통해 하나의 제품으로 생산해 내는 협업체제가 대세이다. 이 부분에서 실사의 범주를 착안했다. 제품을 최종 생산하는 기업만 ESG 경영을 바라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 공동체 전체를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것도 유럽이 선도했다. 유럽은 환경에 관해서 한 발 앞서 준비해 왔다. 준비된 자가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가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ESG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 등이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왜 '공급망 ESG'에 관심이 높아졌을까? 유럽연합이 2022년도 초에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채택한 데 따른 변화의 기류이다.

### 나. 기업 지속가능성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기업 지속가능성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란 무엇인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대상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과 연관된 전 공급망을 실사 대상으로 한다. '가치사슬(value chain)'에 연계된 전 공급망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경영에 대한 주기적으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서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응방안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아울러 이 기업의 자회사, 협력기업, 하청기업을 포함한 역내 9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망에 있는 기업이 생태계 교란 등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조향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등 인권 탄압요소는 없는 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 공시까지 의무화하고자 한

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제재, 민사 책임도 규정된다. 이 부분이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긴장하는 부분이다.

‘기업 지속가능성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발효가 되면 적용 대상이 역내 기업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뉜다. 즉시 적용되는 그룹이 있다. 근로자 500인 초과 및 전 세계 연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의 역내 대기업이 그 대상이다. 또 하나 그룹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근로자 251명 이상 500인 이하 및 전 세계 매출 4000만에서 1억 5000만 유로이며 순 매출액의 50% 이상이 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 등 소위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역내 중견기업이 해당된다.

역외 기업은 유럽연합(EU) 내 연간 순매출이 1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근로자 수 기준 미적용)과 유럽연합(EU) 연간 순매출액 4000만~1억 5000만 유로이며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중견기업이 포함된다. 우리나라가 유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역외 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의존도가 높기에 역외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유럽연합(EU)이 법안에 행정 제재, 민사 책임도 부과하도록 마련한다는 점이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협력사 찾을 때 ESG 평가가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ESG 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유예기간과 함께 보완하도록 시간적 말미를 준다면 다행이지만, 바로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면 중견·중소기업은 청천벽력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이 법안에 직접적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간접적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법안 초안이므로 언제든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변동의 방향성은 유럽연합(EU)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명분은 변함없이 한가지일 것이다. 유럽연합(EU)의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을 구현을 위해 기업의 기업가치에 연계된 공급망의 인권과 환경을 실사해야 한다는 취지에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다. 특히, 수출이 경제성장의 원천인 우리나라는 이 법안의 변동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채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은 2년 이내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아직까지 완전히 내용이 합의된 것은 아니다. ‘기업 지속가능성실사법’을 제안한 집행위원회와 심의기구인 의회 상호간 입장이 다르다. 이런 연유로 언제든지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회원국간에도 상호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자국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행정 제재와 민사 책임 등은 국가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총론적 관점과 국가별 각론적 접근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 1) 도입 배경

유럽연합이 동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EU)은 기본 정책방향이자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핵심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의무에 대한

유럽연합이 주도한 법제화 한 것이다. 기업활동이 종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기업 활동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그린딜전략 위에 기후중립 달성, 친환경 경제 전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예전처럼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라는 점이 달라진 것이다.

그린딜전략이란 무엇인가? 유럽연합의 ESG 근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업의 전략 수립을 위해 알아둬야 한다. 2019년 12월 채택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② 청정·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③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④ 에너지 자원 효율적인 건물 보수 및 수리, ⑤ 친환경 식품 시스템, ⑥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등 6대 정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세부정책을 만들었다.

그린딜전략의 성공은 개별기업만의 협조로는 쉽지 않다. 가치사슬을 둘러싼 생태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이루기가 쉽지 않다.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CA)'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의 골격이나 진배없다. 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에 연결된 모든 과정을 아울러 평가한다.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이 가치(value)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들은 사슬(chain)처럼 연결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사슬은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생산과정, 유통, 소비,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린딜정책 달성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누수현상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비하지 않으면 유럽은 진입장벽이 높은 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개별 기업에 국한되었던 개념을 확장하면서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기업 지배구조에 통합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인권, 기후, 및 환경영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EU) 차원의 규범 도입을 통한 실사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유럽연합 기업들은 복합적인 환경에서 운영된다. 특히 대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존도가 높다. 많은 기업은 공급업체가 포함된 가치사슬 전반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가치사슬과 연계된 공급망의 실사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 또한 높다. 유럽연합 기업은 자사(自社)가 아닌 협력관계에 있는 공급망의 인권과 환경보호 등 연관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완화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더 많은 실사 데이터 수집, 의무적 참여'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더 많은 기업이 협력사의 ESG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연관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현재보다 더 용이하게 그린딜전략을 완성도 높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즉, 유럽연합 기업이 협력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판별하는데 지금보다 한층 더 용이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셋째, 그린딜정책 관련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 내 최소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의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적용될 기준 통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각국마다 복잡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다. 최대공약수를 찾아 지킬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를 선두로 네덜란드, 독일에서 실사 법안을 채택·시행하거나 예정에 있다.

## 2) 실사 의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은 인권·환경과 관련한 기업활동의 전 공급망에 대하여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할 뿐 아니라, 완화·제거 조치를 통해 적절한 대응과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실사 대상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 있는 협력업체 포함한 전 공급망이다. 협력업체 범주는 기업의 직접공급자·하도급자·간접공급자 등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된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란 ‘지속적이고, 가치사슬의 부수적이거나 경미한 부분이 아닌 직간접 비즈니스 관계’로 법안은 정의하고 있다. 기업은 매년 가치사슬 내 어떤 협력업체가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실사 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 ‘실사 내재화’이다. 근로자·자회사의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실사 접근방식과 이행 절차를 기업 정책에 통합하고 관련 규정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진화론에 의하면 강한자가 살아 남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것이 강하다. 기업도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이다. 살아 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일환이 행동강령, 실사 접근방식, 이행 절차 등을 수시로 상황에 맞게 수정 개선해야 한다.

둘째, ‘영향 식별’이다. 가치사슬 내 인권·환경에 대한 실질적이면서 잠재적인 부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위험 산업군기업은 해당 산업과 관련된 심각한 부정적 영향 파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위험 산업군은 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이 해당된다. 섬유산업의 범위는 섬유·가죽·의류·신발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섬유·의류·신발을 도매무역(wholesale)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광물은 원유·천연가스·석탄·갈탄·금속·금속광석·기계장비를 제외한 금속 비금속제품과 같은 채굴하거나, 광물원료 도매무역, 기초·중간 금속·금속광석·건축자재·연료·화학·기타 중간재와 같은 광물제품이 포함된다. 농업·임업·수산업은 식품제조, 농업원료, 도매무역, 살아있는 동물, 목재, 식음료가 해당된다.

셋째, ‘잠재적 예방과 완화’이다. 실사는 파헤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표출된 문제점에서부터 잠재적 부정적 요인까지 찾아내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결과 예방조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협력사와 실사준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실사준수 계약은 표준안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 유럽연합(EU) 집행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표준계약조항(model contract clauses)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업은 제3자가 검증하거나 산업 주도권(initiative)를 적용해 협력사의 실사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된다. 실질적 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3자가 검증은 부득이한 경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해서 실시한다. 그 때 발생

하는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한다. 이런 경우 협력사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뒤따른다. 새로운 사업관계를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넷째, '실질적 영향 종료 및 최소화'이다. 기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고,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한 시정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직접 협력사로부터 기업의 행동강령 및 시정조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계약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 의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협력사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협업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 확장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다섯째, '고충처리'이다. 일이 되도록 할 때에는 기업마다 협력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대응 수준이나 속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럴 때에는 제재 수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와 같은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충처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경영의 이해관계자는 개인, 노동조합, 시민과의 대화 또는 관련 조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불만 해소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를 위해 기업대표와 만날 수 있다.

여섯째, '모니터링'이다. 제도는 계획 수립에서 안착될 때까지 다양한 모니터링이 존재한다. 공급망 ESG 실사는 생산에서부터 소비,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 찾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최소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은 무작위로 최소 연 단위로 실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급망 ESG 실사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이다. 실사 결과는 공시할 의무가 있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 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실사 결과를 공시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면 실사의 효력이 반감될 수 있다. 작위적으로 진행될 여지도 있다. 공시는 또 다른 압박의 수단이 된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시해야 한다. 아직은 공시 기준에 대해 구체적이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실행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으므로 보고기준에 관한 내용을 위임 법률을 통해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K-ESG의 특징 중 하나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이외에 '정보 공시(P)' 영역을 포함했다. 범주에는 '정보공시 형식'과 '정보공시 검증'을 두었고, 진단 항목으로는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3개 항목과 'ESG 정보공시 검증'이다. 그 만큼 공시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ESG 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 또는 정보 공시는 그 무엇보다 비중이 높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은 1차적으로 대기업의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도 지속가능 경영에 동참하여 명실상부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실사법의 적용 대상인 역내·외 대기업은 사업모델 및 전

락이 파리협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상 주요 위험 또는 영향으로 파악될 경우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진 성과 상여금제도가 있는 경우, 기업은 사업계획서 내 명시된 기후대응 의무 이행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상여금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실제 연계하여 운영하는 곳이 영국이다.

영국의 100대 기업 중 51%가 경영진 급여에 ESG 성과를 반영한다. 2020년 3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다. ESG 고려사항을 장기 인센티브 계획에 통합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6.5%에서 2021년 2배 가량 증가한 33.0%이다. 일본도 경영진 보수를 결정할 때 ESG 지표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기업 1042개사를 조사한 결과 ESG지표를 참조하는 기업이 2020년 5.4%에서 2021년 6.4%를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총회의 변화도 한 몫 거둔다. 예전의 주주총회에서는 경영진 보수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점점 찬성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 결과는 경영진에게는 부담이다. 주주가 세밀하게 경영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 다음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ESG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주주의 관심도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경영진 보수에 반영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 **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급망 ESG**

개별기업이 아닌 단체전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어서 부담되는 것이 당연하다. 당장 대기업이 유럽연합 등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관련 정보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잘하고 있는 것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추출된다. 2023년도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므로,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규제를 받는다고 봐야 한다. 규제는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지켜야 하는 사안으로 부담스럽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꽤 오래 소요된다. 리스크도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비록 2024년도부터 행정 제재나 민사 책임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급선무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종료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다. 기업은 매출이 감소하면 이익이 떨어지고 기업의 존폐가 흔들릴 수 있다. 그 만큼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준비하려면 설비 교체 비용이 적은 규모가 아니기에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도 안된다. 중견·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됴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런 한계점이다.

또 하나 당장 현실적으로 아픔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현실론적 회피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뻔한 이치이지만 당장 아픔이 와 닿지 않기에 준비에 소홀하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업 맞춤형(bespoke) ESG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 조직 개편 등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계도기간을 믿으면 안된다. 말 그대로 계도기간이고 순식간에 지나간다. 시간 있을 때 하나씩 준비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이 수월하다.

#### 라. 공급망 ESG의 파급효과

애플은 협력업체 약 80%가 글로벌 공급망 ESG 기준에 부합한다. 애플은 이미 양질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양질의 생태계에 합류하지 못하면 뒤쳐진다. 정글에서 뒤쳐진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인지, 낙오될 것인지가 이제는 ESG 생태계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 셈이다. 알게 모르게 파급효과가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환경'분야이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지이다. '환경'하면 '녹색'이다. '녹색'은 '유럽연합(EU) 택소노미(Taxonomy)'이다. 협력사 '공급망 ESG 관리'도 택소노미를 벗어날 수 없다. 택소노미는 환경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이다. 사실, 초기투자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분야가 '환경'이다. 그 만큼 녹록치 않은 पार्ट임에 분명하다. 그러하기에 유럽연합이 온 신경을 집중해 관리하고 있다. 그 만큼 잣대가 엄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의 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택소노미'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을 경계한다. 가짜 환경친화적 기업은 기후위기의 암적인 존재다. 1차 밴드, 2차 밴드로 환경(E) 부문의 강화를 요구하게 되면 요식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기업이 협력사의 '그린 워싱' 행위를 간과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허나, 현재 법안에 담겨 있는 담론으로 추정해 본다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다. '택소노미'는 무조건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 업종은 각종 금융이나 세제 지원으로 빠른 시간내에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공급망 ESG는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ESG는 단체전이기에 한 두명의 선수가 컨디션이 난조일 때에는 전체 팀워크가 무너질 확률이 높다. 원청기업도 흔들거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 굴지 그룹의 협력사는 일 이백개 수준이 아니다. 천 단위가 넘는 기업이 가치사슬에 연계되어 있다. 애플의 협력사 약 80%가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 부합하듯 수천개의 협력사가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친다면 불가항력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정성적 평가로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디지털의 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원청기업이 플랫폼을 만들고 협력사가 입력한다면, 두 기업 모두 한 방향으로 바라 볼 수 있다. 한 방향을 직시한다는 것은 간극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마. 공급망 ESG 관리는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아직 정답은 없다. 유럽연합이 논의 중에 있다. 다만, 공급망의 범위에 대한 표준은 있어야 한다. 기업의 협력기업은 N차까지 있으며 그 수는 수 천개가 족히 넘는다. 수 천개가 넘는 협력업체 모두를 관리해야 한다면 제품별 부품별 추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많이 보급된 기기 중 하나가 스마트폰이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품이 조립되어 있다. 이 부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시스템이 없다면 N차 협력업체까지 공급망 ESG 관리는 불가능하다. 사실 관리가 된다고 해도 2차 협력업체가 넘어설 때 과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까는 의문이 든다. 예전보다 많이 기능이 개선되었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ESG 기준을 맞출 수 있는 3차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까 싶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협력업체는 1차까지일 때 양질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 추세는 2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정해질 것이다.

협력업체의 '공급망 ESG 관리'는 통제라는 수동적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동반성장의 키워드가 'ESG'가 되었다고 보면 된다.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고 했다. 개별기업이 아닌 양질의 생태계간 경쟁 시대라고 했다. 협력사의 '공급망 ESG 관리'의 한계를 짓기 전에 현안을 어떻게 풀어 갈지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협력기업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줄 수도 없다. 2023년도부터 대기업은 직접 적용대상이고, 협력기업 중 중견·중소기업은 간접영향권에 들어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떻게 든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그 방법은 교육이 첫 번째이고,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첫째, 'ESG 교육'이다. 협력사 역량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교육을 지원한다. 협력사는 ESG가 무엇인지 어렵듯이 안다. 눈 앞까지 다가온 태풍이 아니기에 대기업만큼 심각성이 크지 않다. ESG는 왜(why) 해야 하는지, 무엇을(what)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how)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단계별로 전사적 교육을 지원한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공급망 ESG 관리'에서 일정 수준에 미흡하는 경우 교육을 반복하는 형태로 협력사의 역량 확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ESG 평가 및 컨설팅 추진'이다. 한화솔루션은 협력사와 상생 방안 모색 과정에서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ESG 경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와 어디가 취약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인 이크레더블에 의뢰하여 중소 협력사의 ESG 평가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의 ESG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갈 길이 멀다. 발 빠르게 대응한 일부 기업은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대부분은 아직 개념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과 같은 사회(S) 분야에서 일부 시도하는 수준이다. ESG 현 주소를 파악하는데에는 평가만큼 유효한 것이 없다. 평가는 수준을 파악하고, 파악된 수준을 기준으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컨설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마련된 대안은 직원 교육을 통해 실현한다. 체계적인 지원은 가치사슬에 있는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 **바. 공급망 관리 돕는 이니셔티브 5**

'공급망 ESG 관리'는 원청기업 입장에서는 태풍급의 위력을 가진다. 유럽연합 중심으로 공급망 ESG관리 의무화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산업별로 공급망 관리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공급망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공급망 내에 잠재된 인권리스크, 환경 리스크 등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규범이다. 실제로 평가 과정은 현장 조사를 한다. 경영진 인터뷰도 진행한다. 평가과정에서 노출된 기업 사업장의 리스크가 제시한 행동규범과 일치하는 지 여부도 평가에 반영해서 공개한다. 이니셔티브 회원은 몇 가지 해



택이 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가장 기본이다. 글로벌 최신 정보, 각종 자문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 1) 전자-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는 2004년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연합체로서 2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이다. RBA의 비전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근로자, 환경 및 비즈니스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주도하는 기업 연합이 되는 것이다.

행동 규범으로는 공급망 내 안전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에 대한 존중,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용을 하도록 재정하는 것이다.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관리 시스템 등 5가지 기준이다. 공급망 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업무 관련 재해 및 질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산업안전, 다양성 및 젠더 등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급망 심사는 VAP(Validated Audit Programs)를 통해 진행된다. VAP는 RBA가 승인한 제3자 기관의 인증으로 진행된다. 심사 점수에 따라 실버, 골드, 플래티넘 순으로 세가지 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는다. 강제노동 심사는 현장 조사, 문서 검토, 경영진 및 임직원 인터뷰 등이 진행된다. 만약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현할 것을 권고하고 예방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삼성디스플레이는 2021년 10월 최고등급인 '플래티넘'등급을 확보했다.

RBA는 책임광물이니셔티브(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s, RMI), 책임노동이니셔티브(Responsible Labor Initiatives, RLI), 책임공장이니셔티브(Responsible Factory Initiatives, RFI)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RMI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분쟁단체 자금유입 등의 문제가 없다고 공식 인증을 받은 광산과 원료 회사에서만 광물을 공급받는 책임 협의체로 배터리 시장 확대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 2) 바이오·의약-PSCI(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PSCI는 2006년 미국에서 출범한 비영리 회원 조직으로 제약·의료업계 내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PSCI 비전은 글로벌 제약 및 의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안전, 환경 및 사회적 결과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동규범은 윤리, 노동, 보건 및 안전, 환경 및 관리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PSCI는 공급망 내 계약을 관리한다.

PSCI의 회원은 제약·의료업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자격이 있다. 회원은 실험실, 생산 구역, 폐기물 처리 및 저장 시설 등 모든 공급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할 의무가 있다. PSCI는 2022년 3월부터 6월말까지 공급망 관리 원칙을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3) 자동차-드라이브 서스테이너빌리티(Drive Sustainability)

자동차 업계의 리딩 기업이 순환하는 자동차 공급망 설계를 위해 하나의 이니셔티브로 모인 단체로서, 비전은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동차 가치사슬로 전환이다. 행동규범은 자동차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투명한 협업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동차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성과 판별용으로 공통 자체 평가 설문지(SAQ)를 만들었고, 기업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쟁법을 근간으로 한 참여 기업 상호간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보장하는 것 역시 특징 중 하나이다.

#### **4) 화학\_TIS(Together for Sustainability)**

화학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TIS는 6개 다국적 화학기업이 설립한 이니셔티브로 2011년 설립했으며, 현재 33개 회원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비전은 글로벌 공급망의 작업과 환경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행동규범은 지속 가능성 공급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TIS는 관리, 환경, 안전보건, 노동과 인권,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급망 실사를 진행한다. TIS는 두 가지 심사 요소를 채택하고 있다. 하나는 에코바디스에서 실시하는 공급망 평가이다. 또 하나는 TIS와 제3자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급망 심사이다. 두 가지 심사요소마다 특징이 있다. 에코바디스 평가는 기업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한다. 공급망 심사는 TIS와 독립적 심사기관이 현장 점검과 경영진 인터뷰를 모두 진행한다. 공급망 심사 결과는 모든 TIS 회원에게 공개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기업별로 발생한 부분이 상이하고 그 상이함에서 배워 더 나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다.

#### **5) 패션-SAC(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SAC는 2009년 의류기업 파타고니아와 미국 월마트가 협업해 만든 글로벌 패션 협의체로서, 현재 250개 이상의 의류·섬유 등 패션 공급망 내 기업, 비영리단체, 학술 기관이 참여한다. SAC는 글로벌 패션업계 내 지속 가능성을 논하기 위함이며 비전은 지구와 인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제공하는 글로벌 소비재 산업이 되는 것이다. 행동범은 가치사슬의 환경·사회적 영향과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SAC가 개발한 지속 가능성 표준화 측정 플랫폼은 '힉(Higg)'으로 불리운다. 힉(Higg)은 5가지 핵심 톨을 갖고 있으며, 그 톨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5가지 톨은 시설 환경 모듈(FEM), 시설 사회·노동 모듈(FSLM), 브랜드 & 소매 모듈(BRM), 소재 지속 가능성 지수(MSI), 제품 모듈(PM)이다. 힉(Higg)의 큰 장점은 공급망 관리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코프 3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과 탄소배출량뿐 아니라 제품 수명 종료 시점과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제품 생애주기 관련 정보까지 제공하기에 가능하다.